당정 ‘종부세 개정안’ 갈팡질팡

종합부동산세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에도 불구, 정부와 여당이 각종 이견으로 후속 조치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1주택 장기보유자 과세의 경우 ‘장기’의 기준과 감면 폭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이다. 또 종부세 폐지 문제와 과세 기준을 놓고도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1주택 장기 보유 기준점 등 사안별로 불협화음

한나라 ‘세율 0.5~1% 인하’ 연내 입법화 추진

◇1주택 장기보유 기준=정부는 ‘3년 이상’을 보유하면 감면하는 방안을 한나라당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종부세 감면폭은 10~20%를 일률적으로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임태희 정책위의장도 17일 MBC 라디오에서 개인 의견을 전제로 “3년 보유부터 감면을 시작한다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3년 보유라면 장기보유라기보다는 단기보유 아니냐”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종부세 폐지 논란=국세인 종부세를 지방세인 재산세와 통합하는 방식으로 종부세를 폐지하겠다는 정부의 중장기 정책에 대해서도 당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홍 원내대표는 “종부세는 종부세대로 존치하고 재산세는 재산세대로 운영하는 것이 맞지 그것을 두 개로 합치자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 방침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하지만,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한다는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못박았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정부 측 의견에 가깝다. 그는 “종부세와 지방세가 얽혀 있기 때문에 지방세 조정에 대한 대안이 마련된 다음에 가능할 것”이라며 “중장기 과제로 넣어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과세기준=한나라당은 종부세 과세기준의 경우 현행 6억원을 유지하는 쪽으로 의견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식적으로는 “아직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다”고 하고 있지만 홍 원내대표는 “과세기준은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사실상 결론난 것 아닌가 싶다”며 “(정부 수정안처럼) 9억원으로 올릴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도 9억원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인 이종구 의원도 “정부도 위헌 등 여러 가능성을 따져 본 뒤 기준을 9억원으로 잡은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야 한다”며 “다만 2년에 걸쳐 단계별로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또 현행 1~3%인 종부세 세율은 정부안을 수용해 0.5~1%로 인하할 방침이다. 임 정책위의장도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 “인하안은 그대로 입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감사원, 직불금 28만명 명단 제출은 했으나…

건보 비협조…직업분류 안돼 ‘무용지물’

국정조사 1주일 연기 합의

국회 쌀 직불금 국정조사특위 송광호 위원장(가운데)과 한나라당 장윤석(왼쪽), 민주당 최규성, 선진과창조모임 김창수(오른쪽) 간사가 17일 국회 본청에서 간사모임을 갖고 쌀 직불금 수령자 명단 처리문제 등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감사원이 17일 국회 ‘쌀소득보전직불금 국정조사특위’에 직불금 수령자 28만여 명의 명단을 제출했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의 비협조로 직업 분류가 돼있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야당 측은 이에 대해 ‘무용지물’ 수준이라고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총력을 기울여 사회 지도층의 관련 여부를 추적한다는 각오다.

감사원은 지난 14일 2006년 쌀 직불금 수령자 중 비료 구매와 벼 수매 실적이 없는 28만여 명의 수령자 명단 복구를 완료, 이날 오후 명단이 들어있는 CD와 관련 문서들을 국정조사 특위 행정실에 제출했다.

그러나 특위 간사인 최규성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감사원 명단에는 수령자의 이름과 주소 등 인적 사항과 경작지 면적과 주소만 기재돼 있어 사실상 국조특위에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며 “정형근 공단 이사장이 향후 협조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적극 조치할 것”이라고 정형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질타했다.

선진과 창조의 모임 김창수 간사도 “공단 측은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명단 제출에 난색을 보이는데, 그러면 감사원과 농촌공사 등 명단 제출을 하고 있는 다른 기관들은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냐”라고 거들었다.

한편, 여야 3당 교섭단체 간사들은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하고 정부의 명단 제출이 늦어짐에 따라 18, 19일 예정된 6개 기관 보고를 25, 26일로 늦추고, 오는 26~28일 예정된 청문회도 내달 3~5일로 일주일씩 순연하기로 합의했다.

또 내달 10일 종합 기관보고를 받고 내달 12일 국정조사 최종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1주택, 10년은 넘어야 장기 보유”

민주 ‘종부세 완화’ 저지 총력…내일까지 개편안 제시

민주당이 종부세의 일부 위헌 관결에도 불구, 종부세의 근간을 뒤흔드는 ‘무분별한 완화’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17일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민주당은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감면에는 동의하되 15억원 미만의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한 사람에게 종부세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와 여당에서는 ‘3년 이상’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민주당은 또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에 고가 주택을 제외하는 등 범위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오는 19일까지 종부세 개편방안을 제시키로 했다.

경제부총리 출신의 민주당 김진표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행법상 주택 과세기준인 6억원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세대별 합산이 폐지되고 인별 합산으로 바뀜에 따라 12억원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을 길이 열렸기 때문에 현행법상 규정된 주택 과세기준인 6억원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10년 이상 보유자에게 감면혜택을 주는 방안을 민주당은 추진하되 6억 이하 보유자로 감면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에는 절대 응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최고위원은 또 한나라당이 종부세율을 정부안인 0.5~1.0%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대해서도 “한나라당 말대로 세율을 내리면 재산세의 초과세율과 종부세의 최저세율이 같아져 6억원이 아니라 15억원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게 된다”면서 “한나라당 식으로 하면 종부세는 있으나마나 한 세제가 된다”며 종부세 무력화 시도를 저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세균 대표는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부자만 쳐다보고 일방통행하고 있다”면서 “종부세에 대한 한나라당의 대응은 부자감세를 확실히 챙기고 투기에 아주 관대한 정당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비난했다.

한편, 자유선진당은 정부여당의 종부세 개편 추진으로 1조4천억원 가량의 지방재정 결손이 예상된다면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함께 지방 소비세와 지방 소득세를 신설하거나 부가가치세의 절반 정도를 지방에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환갑 지난 의원들 “민주당 구하기”

‘민주 시니어’ 창립 “당 정체성 없다” 쓴소리

지지율 답보에 갈피를 못 잡고 있는 민주당을 구하기 위해 ‘노장’ 의원들이 나섰다.

60세 이상 의원 15명이 참여하는 ‘민주 시니어’(가칭)가 17일 창립총회를 열고 현안에 대한 의견을 모아 지도부에 전달하는 등 민생 해결에 앞장서기로 한 것이다. 당내에 구심점이 없다는 안팎의 지적을 받고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의사를 개진하기로 했다.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박상천(5선), 김충조(5선), 문희상(4선), 홍재형(3선), 강봉균(3선), 김성순(재선), 박지원(재선)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참석, 연장자인 의원들이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는 데 뜻을 함께했다.

이 모임 간사인 김성순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당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며 “우리가 정책정당으로 거듭나 차기에 집권할 능력이 있느냐. 이대로 가면 참으로 어렵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김충조 의원은 “얘기를 해봤자 반영될 성싶지도 않다 하는 감을 갖고 있었지만 (이 모임이) 당에도 국회에도 반영이 되는 그런 중심체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도 “의정·국정에 많은 경험을 가졌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 민주당에서 활용의 대상이 되고 우리도 민주당에 지혜를 줄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거들었다.

하지만, 위기 타개를 위한 구체적 방안에 있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3선의 강봉균 의원은 현 지도부의 강경노선을 꼬집었다. 강 의원은 “말로는 외환위기를 극복한 경험 있는 정당이라는데, 대안을 내야 할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의장 출신의 문희상 의원은 “그나마 현 체제가 대표도 그렇고 원내대표도 그렇고 온몸으로 열심히 잘했다. 지키는 것이 어려운 것이고 그런 것은 굉장히 성공하고 있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한, 中企 대출 보증비율 한시적 100% 검토

朴 대표 “도산한 뒤 지원 우려…스피드 중요”

한나라당은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을 독려하기 위해 보증기관의 중기 대출 관련 보증 비율을 한시적으로 100%로 확대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17일 서울 구로구 소재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갖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당 정책위에서 80%였던 보증 한도를 95% 정도로 올려주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한시적으로 100% 보증이 이뤄져 (중소기업이) 신용보증서를 가져오면 은행이 쉽게 중소기업 대출을 해 주는 구조를 마련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0일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내년에 제공하는 보증 비율을 평균 95%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희태 대표는 “금융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방안들이 발표되고 시행됐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아직도 금융지원이 전혀 없다는 것”이라면서 “이러다가 현장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다 도산한 뒤 지원한다는 우려조차 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제는 속도로, 우리가 정부에 항상 촉구하는 것이 스피드”라면서 “슬로 헬프 이즈 노 헬프(Slow help is no help·도움이 늦으면 아무 도움이 안된다는 뜻)”라고 신속한 지원을 촉구했다.

그는 “우리는 경제적 약자를 돕는 것을 제일 목표로 하고 있다. 서민과 중소기업을 돕는데 전심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